

서울시교육감선거 D-30

진보·보수 후보간 ‘평등 vs 수월성’ 확연한 시각차

혁신학교

조희연 “모든학교로 확대”

박선영 “사실상 폐지”

조영달 “추가선정 중단”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마무리돼 본격적인 정책 대결이 시작될 전망이다. 각 진영은 혁신학교와 특목고 정책을 두고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권한 밖이지만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극과 극의 입장이 엇갈린다.

13일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면, 진보 진영 측의 대표정책인 혁신학교정책과 올해부터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치르는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혁신학교는 성적으로 출세유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소질과 소양에 따른 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학교혁신교육 모델로, 조희연 후보(서울시교육감)가 추진해오던 정책이다.

혁신학교는 조 후보 시절 매년 꾸준히 늘었고, 올해 200개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 후보는 공약집에서도 혁신학교 확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현행 존치”

“100% 추첨제 전환”

대와 함께 질적향상도 도모하겠다고 했다. 지난 9일 진보 단일후보 선출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혁신교육 3.0’ 비전을 통해 서울형 혁신학교의 질적·양적 심화와 함께 일반고등학교로 일반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보수진영 단일 후보인 박선영 후보는 혁신학교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혁신학교 학생 상당수가 기초학력 미달로 학력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혁신학교 예산 우선지원도 없애겠다고 하고 있어 사실상 혁신학교 폐지를 공약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도로 분류되는 조영달(서울대 사범대 교수) 후보는 혁신학교 확대를 막겠다는 공약을 냈다. 혁신학교 추가 지정을 중단하고 부작용으로 제기되는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 등을 우선 보완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 정책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조 후보는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면 자사고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해오다 올해부터 일반고와 동시선발 제도로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조희연(사진왼쪽부터), 박선영, 조영달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뀌, 사실상 자사고와 외고 지원자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선거 이후에도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는 특히 진보진영 측에서 주장하는 국제중의 일반학교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자사고와 외고의 현 체제를 그대로 두고 학생 선발제도도 유지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다만 이들 학교가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은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달리 조영달 후보는 특목고를 존속하도록 하되, 학생 선발 방식을 100%

추첨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고교 입시를 전면 폐지를 공약한 셈이다. 조 후보는 지난달 19일 정책비전 발표회에서 “외고·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의 본래적 가치 추구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존속을 보장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불편 해소를 위해 추첨 등의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특히 자사고는 학교가 원하는 경우 일반고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의견차도 크다. 대입제도 개편은 서울시교육감의 권한 밖이지만, 초·중등 교육과 대학입시의 일관성이 필요한만큼 교육부-서울시교

육청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조 후보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과 수능 성적 위주 전형인 정시전형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교육부의 수능 절대평가 확대 기초와 다르지 않다. 반면 박 후보는 수능 일부 과목 상대평가인 현 체제를 유지하고, 정시 모집 인원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영달 후보의 경우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함께, 수능의 자격사화를 주장하고 있다. 조 후보는 장기적으로 대학 신입생 선발을 입학사정관제와 면접을 통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인 박 후보 외에도 2명이 단독 출마할 것으로 보여, 진보 단일후보 1명, 중도 후보 1명, 보수 단일후보 1명에 보수 진영 1~2명이 단독 출마해 4~5과전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박 후보 외에 광일전 전 미디어텍고 교장이 단일화에 불참해 단독 출마를 시사한 상태고, 앞서 이준순 대한민국미래교육연구원장이 독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지난 11일 단일후보 수락연설에서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과 힘을 합쳐 전교조 교육을 종식시키고 수렁에 빠진 서울교육을 건져내겠다”면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초·중·고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 온라인 시스템 /교육부

교육부 “초등학생부터 창업 체험·교육”

온라인 가상회사서 기업가 체험

그동안 대학생과 일반인 위주로 운영되던 창업 체험과 교육이 올해부터 초·중·고교로 본격 확대된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중·고 학생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체험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창업 체험·교육을 초·중등교육 단계까지 확대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인프라 구축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초·중·고 학생이나 교원 누구나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https://yeep.kr>)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의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교사에게는 창업체험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기존 중·고교 학교 단위로만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초·중·고교 학생, 교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또 ‘가상 창업체험’ 기능을 신규로 만들어, 학생들이 가상

기업을 설립해 역할에 맞는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체험교육 기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스타트업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창업체험센터’를 5곳 증설해 총 10개소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센터에서 가상현실(VR), 드론,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경험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학교 수업 기반 창업체험교육 확산을 위해, 전국 27개 창업체험교육 교사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콘텐츠 26종(EBS),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가상 체험 콘텐츠 5종을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창업교육 지원 민·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 창업경진대회와 교원 창업체험교육 우수사례 공모전도 실시한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앞으로는 도전정신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갖춘 혁신 인재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풍부한 체험을 통해 미래 혁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교수사회 고령화 심각... 60대 ↑ 64% 급증

(2012~2016)

‘신진 연구자’ 30대 교수 감소
박사학위 취득 후 기간 길어져

교수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하며 ‘신진 연구자’인 30대 이하 교수 숫자가 4년 새 60대 이상 교수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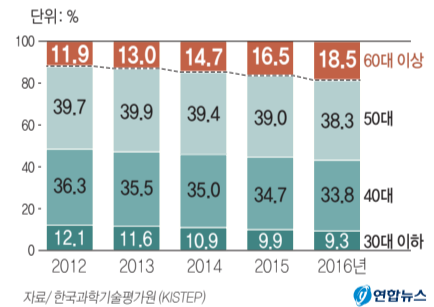
1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EP)의 ‘전국대학 연구활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수는 2016년 7만4461명으로, 2012년 7만914명보다 3547명(5%) 증가했다.

2016년 전임교원을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교수가 1만3천803명으로 4년 전보다 5천387명(64%) 급증했다. 전체 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1.9%에서 18.5%로 높아졌다.

50대는 2만8536명으로 4년 새 375명(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40대는 2만5182명으로 541명(2.1%) 줄었다.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연령별 비중 변화



신진연구자로 분류되는 39세 이하 교수 수는 2012년에는 8천614명으로, 60대 이상보다 200명가량 많았지만 2016년에는 6천940명으로 1천674명(19.4%) 급감하며 60대 이상의 절반에 불과했다.

신진연구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년 새 12.1%에서 한자릿수인 9.3%로 떨어졌다.

60대 이상과 30대 이하 교수 숫자가 크게 벌어진 것은 박사 학위를 딴 후 신입 교수가 되기까지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수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하면 전체 교수사회의 연구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0대 이하 교수는 1인당 연구비가 2016년 2천697만원으로 전체 평균(5천701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전문학술지에 실린 논문 수는 1인당 0.48편으로 평균(0.39편)의 123%에 달했다.

60대 이상은 1인당 연구비가 4천440만원으로 30대 이하의 1.6배였지만 SCI급 논문 수는 0.25편으로 30대 이하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전체 논문 수에서도 60대 이상은 0.64편으로 30대 이하의 0.82편에 못 미쳤다.

김소형 한국연구재단 연구위원은 “박사 학위를 딴 뒤 포스트닥터(박사후과정)를 마칠 때까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진 교원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며 “연구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도전적 연구에 적극적인 신진 연구원에 대한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교육부 ‘마이스터 프로그램’ 직업계고 학생 참가자 모집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8기 IP(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6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산업현장에 반영하는 고교 단계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모델로 지난해 특히 50건 출원, 기업 기술이전 7건, 연계 채용 2명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올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협력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현장연계과제, 참여기업이 제시한 산업현장 문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내는 ▲테마과제로 나눠 접수한다.

특히 기계기술, 전기전자, 생명·화학, 생활용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참여한 기업은 테마과제를 출제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현장 견학과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으로 팀을 구성해 발명교육 누리집(www.ip-edu.net) 등으로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달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50팀을 선발하며, 선발된 팀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지식재산권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2회의 캠프 등 발명·지식재산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최종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기업 관계자 등에게 기술이전 상담을 받도록 지원한다. /한용수 기자